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문 20답으로 알아보기 -**



**대통령실**

“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여러 국가가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한 자발적 감축을 추가적으로 선언하고,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 도난 방지와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 확보,  
구체적 협력방안까지 논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2012.3.13,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현인그룹 오찬시

”

# CONTENTS

## 목 차

<b>I</b>	<b>핵안보정상회의의 필요성</b>	<b>05</b>
Q1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엇인가요?	
Q2	핵안보가 50여 개국 정상이 모여서 논의할 만큼 중요한 이슈인가요?	
Q3	핵안보는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했나요?	
Q4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Q5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요?	
<b>II</b>	<b>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b>	<b>12</b>
Q6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언제 열리며, 어떤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참가하여 무엇을 논의하나요?	
Q7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Q8	의정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Q9	핵안보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b>III</b>	<b>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와 준비상황</b>	<b>19</b>
Q1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일정과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Q11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Q12	핵안보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한 각국 간 교섭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Q13	북핵 문제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로 다뤄지나요?	
Q14	'원자력 안전' 문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Q15	'방사능 테러' 문제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나요?	
<b>IV</b>	<b>핵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b>	<b>25</b>
Q16	핵안보, 핵군축, 핵 비확산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Q17	핵안보 관련 국제 규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Q18	지금까지 핵안보를 위해 이루어진 국제 협력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19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안보에 어떠한 함의를 갖나요?	
Q20	우리나라의 핵안보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b>참고</b>	<b>핵안보정상회의의 관련 오해와 진실</b>	<b>31</b>
Q1	핵군축 및 핵 비확산 논의 없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무의미하다?	
Q2	핵안보정상회의는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Q3	원전 재기를 위한 기회로서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한다?	
Q4	부대행사인 '2012 서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 등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것 아닌가?	
Q5	현 정부의 정책은 탈원전이란 국제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Q6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Q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된다?	
Q8	북한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I

## 핵안보정상회의의 필요성

### Q1 핵안보정상회의가 무엇인가요?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21세기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포럼으로서, 전 세계 핵물질과 핵 시설이 테러 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방호 조치 강화와 국제 협력 증진을 논의하고 도모하는 회의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프라하 특별연설에서 핵테러 대처를 위해 “향후 4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핵안보의 개념

핵물질, 방사성 물질 및 관련 시설 또는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외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탐지·지연 및 대응 수단으로 이를 저지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말합니다.



## Q2 핵안보가 50여 개국 정상이 모여서 논의할 만큼 중요한 이슈인가요?



“핵테러는 현 시대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다. 단 한 번의 핵테러도 대량살상과 엄청난 고통과 원치 않는 변화를 영원히 초래할 것이다. 이런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007. 6)

### 핵테러는 가상이 아닌 실제적 위협

민간 항공기로 도심 고층 빌딩을 강타하여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는 더 이상 대량파괴무기인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도 가상이 아닌 발생 가능한 실제적 위협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핵테러에 대해 느끼는 위협 인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안보에 있어서만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하며, 핵 또는 방사능 테러는 설령 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테러 위협에 대한 환경 불변

오사마 빈 라덴 사후에도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테러리스트 등 비국가 행위자가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핵물질 획득과 무기 제조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밀매 등 불법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한 국가



의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과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경 통제, 형사 공조 등을 비롯한 국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핵테러는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요즘과 같이 상호 의존이 심화된 세계화 시대에 핵테러는 미국 등 서방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이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테러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 조치들을 논의하는 핵안보정상회의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 **Q3 핵안보는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했나요?**

#### **1960년대부터 논의 시작**

아닙니다. 1960년대 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커짐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동 중인 핵물질의 불법 탈취 등을 예방하여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핵안보의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 **냉전 종식 이후 필요성 제고**

1990년대 초 냉전 종식에 따라 구소련 영토 내에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동 지역 내 핵물질·시설의 폐기 및 감축, 보호 등이 핵안보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 **9·11 테러 이후 현실적 필요성 크게 증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가 크게 강조된 것입니다.





## Q4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테러리스트의 핵무기 사용은 매우 현실적인 위협

가장 기본적인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는 고농축 우라늄(HEU)의 경우 25kg 정도가 필요하고, 플루토늄(Pu)의 경우 8kg을 가지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핵물질이 여러 경로로 탈취되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 세계에 12만6500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핵물질 산재

현재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 약 12만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단 하나의 핵무기라도 도시 한복판에서 터뜨릴 경우 수십만 명의 인명을 앗아갈 뿐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세계 경제·금융망이 일순간에 마비되어 세계적 차원의 재앙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사회·환경·심리적 후폭풍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 Q5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는 무엇인가요?

### 정상 선언문 ‘워싱턴 코뮈니케’ 채택

“핵테러는 국제 안보에 대한 가장 도전적인 위협 중 하나이며, 강력한 핵안보 조치는 테러리스트의 핵물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 ‘작업계획’에 합의

별도 작업계획 문서를 통해 11개 분야 50개 구체 핵안보 협력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기여

워싱턴회의에서 부각된 또 다른 주요 성과는 참가국 중 30여 개국이 각각 국가별 자발적 공약(national commitment, 또는 ‘house gift’라고 칭함)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약에는 고농축 우라늄 회수 및 최소화, 핵안보 관련 협약 비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기금 기여 확대,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가입, 핵안보훈련센터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기여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 세계핵테러방지구상 총회 개최와 한국 내에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여 참가국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2010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0. 4. 12~13, 미국 워싱턴
- 참가국 : 47개국 정상, 유엔·IAEA·EU 대표
- 주요 성과 : 핵안보 강화에 관한 공약을 담은 '워싱턴 코뮈니케' 및 구체 '작업계획' 채택

### 주요 논의 사항

- 고농축 우라늄 최소화
- 핵안보 관련 입법 조치 및 국제협약 가입
- 정보와 최적 관행 공유 등 실천 조치
- 핵테러 방지를 위한 양자 차원의 협력
- G8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핵테러방지구상 등 다자 차원의 협력
- IAEA,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 II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미

**Q6**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언제 열리며, 어떤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참가하여 무엇을 논의하나요?

일시 및 장소 : 2012. 3. 26(월)~27(화), 서울

참가 대상은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가한 47개국 및 3개 국제기구 유엔, IAEA, EU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며, 몇 개 국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참가국 및 국제기구 명단

아시아(12)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미주(6)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캐나다
대양주(2)	뉴질랜드, 호주
유럽(18)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메니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중동(7)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2)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4)	국제연합(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 논의 사항

핵안보 기본 의제인 핵테러 대응, 핵물질 및 핵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 거래 방지 방안과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원자력 안전 문제,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토의될 전망입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인 핵안보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다루어질 것입니다.



### 핵안보 관련 세부 테마

-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관리 강화 및 이용 최소화
-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강화
- 핵테러억제협약, 핵물질방호협약 등 국제 규범에 대한 각국의 가입 확대
- 핵물질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보 활동 지원



## Q7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 비전과 이행 조치 제시

서울 정상회의는 핵안보에 관한 실천적인 비전과 이행 조치들을 제시함으로써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 합의 사항들을 진전시켜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실행 목표와 조치들을 창출할 것입니다.

### ‘서울 코뮈니케’ 채택

서울 정상회의 비전과 실천 조치들은 정상 선언문인 ‘서울 코뮈니케’에 담길 것입니다.

서울 코뮈니케에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관리, 핵시설의 방호, 불법 거래 방지 등 핵심 이슈와 함께 핵안보 관련 규범·정책·제도·문화·기술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참여국들과 협의 중입니다.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새로운 동력을 얻어 정치적 선언의 단계에서 실천의 단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Q8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기자회견 개최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의 모든 세션을 주재하며 정상회의 결과문서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정상회의 종료 직후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대내외 언론에 설명합니다.

### 의제를 조율하고, 정상 선언문 '서울 코뮈니케' 주도

정상회의 결과문서가 될 '서울 코뮈니케' 성안을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며, 정상회의 이전 여러 차례 개최되는 교섭대표회의와 부교섭대표회의에서 참가국 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도록 준비합니다.

### 실질 성과 확보 노력 및 국가 그룹 간 가교 역할 수행

각국이 개별적 공약을 발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가며,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선·후진국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초청 대상 선정

정상회의에 초청할 대상은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연속성을 위해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에 참가한 46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를 모두 초청했으며, 참가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를 추가했습니다.

여타 참가국을 확대하는 문제는 해당국의 공식 참여 요청과 핵안보정상회의의 기여 가능성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 주최 주요 정상회의 규모

- 2000년 ASEM 정상회의 : 26개국 정상 참가
- 2005년 APEC 정상회의 : 21개국 정상 참가
- 2010년 G20 정상회의 : 26개국 정상 및 7개 국제기구 대표 참가





## Q9 핵안보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 9·11 테러 이후 국제 안보 논의의 큰 흐름을 주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탈냉전, 특히 9·11 테러 이후 국제 안보 논의의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안보는 핵군축, 핵 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한 탈냉전기 국제 안보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 안보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인정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이 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핵위협하에 있으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고, 세계 5위의 모범적 원자력 강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처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력과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201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이 매우 유동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했고 2012년에는 미국, 러시아 및 중국 등에서 대선 또는 지도부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전 세계의 주요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 **원자력 및 원전산업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회복**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위축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코리아 국격 제고 및 외교강국 발돋움**

50여 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중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상 행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세계 경제 분야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데 이어 국제 안보 분야의 최대 다자 정상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제와 준비상황

### Q10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일정과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서울 정상회의는 2012년 3월 26(월)~27일(화) 이틀간 개최되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행사 내용
2012. 3. 26	환영 리셉션
	업무 만찬
2012. 3. 27	오전 회의
	업무 오찬
	오후 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특별 문화행사

공식회의 일정 전에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제고하고 정부·민간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부대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핵안보 국제 학술회의(3. 23) : 국제 핵안보 전문가 참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외교안보연구원 주관
- 원자력 산업계 회의(3. 23~24) : 국제원자력 산업계 CEO 참여,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



## Q11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

- 2010년 10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치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외교통상부 장관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 장관</li> <li>• 통일부 장관</li> <li>• 행정안전부 장관</li> <li>• 지식경제부 장관</li> <li>• 대통령실장</li> <li>•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li> <li>• 대통령 경호처장</li> <li>•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li> <li>• 한국전력공사 사장</li> <li>• 교육과학기술부 장관</li> <li>• 법무부 장관</li> <li>• 문화체육관광부 장관</li> <li>• 국가정보원장</li> <li>• 국무총리실장</li> <li>•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li> <li>• 한국원자력연구원장</li> <li>•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li> <li>• 한국수력원자력 사장</li> </ul>

- 2011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설치(단장 : 외교통상부 장관)

### 참가국 교섭·부교섭대표회의

- 교섭대표회의 : 부에노스아이레스(2010. 11), 헬싱키(2011. 10), 인도(2012. 1), 서울(정상회의 직전)
- 부교섭대표회의 : 오스트리아 빈(2011. 3), 서울(2011.6)



## Q12 핵안보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한 각국 간 교섭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2009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제안된 이후 각국은 의제 및 진행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교섭대표(Sherpa)와 부교섭대표(Sous-Sherpa)를 임명하여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정상회의도 각국이 임명한 교섭대표와 부교섭대표가 각각 교섭대표회의 및 부교섭대표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는 3, 4차례 교섭대표회의가 개최되며, 그 사이에 필요에 따라 부교섭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왜 교섭대표를 Sherpa라고 부르나요?

히말라야에서 등반할 때 짐 운반과 길 안내를 하는 사람을 흔히 ‘셰르파(Sherpa)’라고 부르는데, 티베트어로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동쪽이라는 Sharr와 사람들이라는 뜻의 pa의 합성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정상회의의 실무 준비를 하는 책임자들을 흔히 셰르파라고 부릅니다. G20 정상회의 때도 교섭대표를 셰르파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 Q13 북핵 문제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로 다루어지나요?

**북핵 문제는 핵 비확산 이슈로 핵안보 이슈와 다름**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핵 비확산 이슈로서 각각의 정치적 해결 메커니즘(6자회담 또는 P5+1 협의체)을 비롯, 핵확산금지조약(NPT), 유엔 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으로, 핵안보정상회의의 핵심 논의 의제는 아닙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도 핵시설 및 물질의 통제와 관련해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시설 및 물질은 핵 비확산 측면에서 폐기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5월 베를린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확고히 합의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할 용의가 있음을 제안한 것입니다. 세계 50여 개국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핵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 **핵안보(nuclear security)와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의 차이점은?**

핵안보는 비국가 행위자 즉 테러·범죄 집단으로부터 핵·방사성 물질과 그 시설을 방호하여 핵테러 및 방사능 테러를 막겠다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핵무기 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핵 비확산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Q14 '원자력 안전' 문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어떻게 다루어나요?

### 원자력 안전은 핵안보와 상호 보완적 발전 필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들의 원전시설에 대한 공격 시 그 결과는 원전 사고 시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대응에 있어서도 유사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은 상호 보완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핵안보가 전제되어야 가능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깊이 연구되고, 이를 통해 양자가 상호 강화될 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더욱 촉진될 수 있습니다.

### 원자력 안전 문제도 핵안보 강화의 맥락에서 다루질 것으로 기대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상 포럼이므로,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핵안보 문제가 계속 중심 주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 문제도 핵안보정상회의의 초점인 핵안보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데 원자력 안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데 참가국들의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Q15 '방사능 테러' 문제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나요?

### '방사성 물질 안보' 문제도 논의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 시 논의가 미진했던 방사성 물질 안보에 대한 논의가 보강될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이른바 dirty bomb)는 원료 물질을 획득하고 폭탄으로 제조하기가 용이해 핵테러보다 피해 규모는 작지만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서 그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방사능 피폭에 대해 일반 시민이 느끼는 두려움도 핵테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방사성 물질 도난·분실 사고가 다수 발생

국제원자력기구 국제 불법 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핵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의 도난·분실 신고 사례의 약 3분의 2가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방사성 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나라별 조치와 국제 협력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며,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IV

## 핵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Q16 핵안보, 핵군축, 핵 비확산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 핵안보(nuclear security)

핵무기나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핵안보를 “핵물질, 여타 방사성 물질, 핵물질 관련 시설 및 방사성 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악의적 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하며, 그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무기 수를 줄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합의를 통해 실전 배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로 감축하기로 한 것이 그 예입니다.

####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고 있는 5개 핵 보유국(미, 러, 영, 프, 중) 이외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핵안보를 위한 주요 조치

- 핵물질 최소화(minimize nuclear materials)
- 원자로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sabotage) 방지
- 위협 설계 기준(design basis threat) 설정
- 핵물질 계량(nuclear accounting)
- 핵 감식(nuclear forensics)
- 국경 통제(border control)
- 불법 거래(illicit trafficking) 방지
- 운송 보안(transport security)
-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 등



## Q17 핵안보 관련 국제 규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핵테러억제협약(ICSANT)

- 2007년 7월 발효
- 115개국 서명, 77개국 비준·가입(2011.9.2 기준)
- 인명 살상, 재산·환경 파괴를 목적으로 핵·방사성 물질 및 장치의 제조 보유·사용 및 핵·방사성 물질을 방출하는 방법으로 핵시설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 1987년 발표, 2005년 7월 개정안 채택
- 각국 관할권 내 핵물질 및 국제 이동 중인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이행하고, 핵물질 도난·횡령·강제탈취 시도 및 관련 위협 등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
- 특히 2005년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은 핵시설의 방호 조치를 추가

###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강제적 규범)

- 2004년 4월 테러 집단에 대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저지를 위해 채택
- 비확산·수출 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국내 조치를 담은 국가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 Q18 지금까지 핵안보를 위해 이루어진 국제 협력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G8 글로벌 파트너십

- 배경 : 9·11 테러 이후 구소련 지역의 대량파괴무기 관리 및 통제를 위해 2002년 6월 G8 정상회의에서 창설(25개국 참여)
- 주요 사업 :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내 핵물질 시설 방호 강화, 화학설비 폐기, 과학자 재고용 등
-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참여, 2010년까지 460만 달러 기여

### 세계핵테러방지구상

- 배경 : 핵물질 불법 거래 방지 및 핵테러 대응 관련 정보 교환 촉진을 위해 미국 과 러시아 주도로 2006년 7월 발족
- 82개 회원국 및 4개 옵서버(IAEA, EU, INTERPOL, UNODC) 참여
- 2011년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 우리나라 개최(6. 29~30, 대전)



## Q19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안보에 어떠한 함의를 갖나요?

핵테러 또는 방사능 테러의 방법은 테러리스트들이 주로 핵물질을 취득하여 핵 또는 방사능 폭발장치를 제조하는 것으로 인식돼왔습니다.

그러나 원전 냉각장치 등의 고장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물질 탈취보다는 핵시설의 중요 부분을 오작동시키거나 원자력 시설 파괴 또는 비행체에 의한 충돌 등 사보타주를 통해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의 구별은?

원자력 안전은 자연재해나 기술적 고장 등에 기인한 원전 사고에 대응하는 것으로, 악의적 행동에 의한 의도성이 내재된 핵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핵안보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이나 핵안보는 일단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람과 환경에 방사능 위험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유사합니다.



## Q20 우리나라의 핵안보 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 핵안보 관련 국내 법령

- 원자력법
- 1995년 ‘원자력법’ 개정 이후 일부 핵안보 관련 사항 반영
- 원자력 시설과 핵물질의 운송에 있어서 물리적 방호조치 보장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선 방재대책법
- 2004년 ‘방호방재법’을 제정
-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에 대한 방호 시책을 규정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심사제도를 도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 2005년 개정 원자력법에 근거, 2006년에 원자력 관련 시설과 핵물질 등에 대한 안전 조치와 물리적 방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설립
- 국내 원자력 시설의 방호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방호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내 핵안보 시스템을 운영·유지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예정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이슈를 조정하고 관련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2011년에 새롭게 설치



참고

##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오해와 진실

### Q1 핵군축 및 핵 비확산 논의 없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무의미하다?

-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다음 세대에 물려 주자는 평화 정상회담으로 현 시대의 시급한 안보적 도전에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 핵안보의 궁극적인 목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이며, 핵안보를 통한 핵물질 폐기 및 최소화는 핵군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물질 및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테러 위협을 방지하자는 것이 핵안보 정상회의의 근본 취지입니다.
  - 핵군축과 핵안보는 같이 추진되어야 하며, 핵안보 논의 지연이나 중단은 핵테러 위협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 핵군축 및 핵 비확산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별도의 협의 메커니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화되어 단기간에 국가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안보 분야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의 합의는 향후 핵군축 및 핵안보 분야의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신뢰를 구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결과문서인 '워싱턴 코뮈니케'에도 핵군축 및 핵 비확산이 참가국들의 공동 목표임을 확인했습니다.
- 핵군축이 이뤄지더라도 원전 등 시설 테러 문제, 방사능 테러 문제도 있으므로 핵안보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 Q2 핵안보정상회의는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 핵테러 방지는 소수 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대량파괴무기 확산 및 테러 행위의 방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540 채택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이슈입니다(안보리 결의 1373, 1887도 동일한 내용 채택).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2007년 핵테러를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 핵안보정상회의에는 핵무기 보유국을 비롯해 NPT 비당사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비동맹 국가(옵서버 포함 총 26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상회의에 50여 개국(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규모 94%, 인구 규모 80%선)이 참여한다는 것은 핵테러 방지가 국제사회의 공통의 안보 과제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 핵테러는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모든 시민의 문제입니다.

## Q3 원전 재기를 위한 기회로서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한다?

- 민수용 원자력발전 정책은 핵확산금지조약상 핵무기 불추구의 조건하에 보장된 권리(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로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며 핵안보 정상회의의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원자력발전 추진 국가, 원자력발전 불추진 국가 등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여 기의 원자로가 있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감안할 때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테러 위협인 사보타지를 방지하는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현재의 위협과 위협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동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 Q4 부대행사인 '2012 서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 등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것 아닌가?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인 '2012 서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은 정부 주관 행사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주) 주관 행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이 행사의 기본 취지도 원자력 산업계 차원에서 원전시설에 대한 테러 방지를 위하여 안보 측면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떻게 서로 협력해나갈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전 세계 원자력 산업계 CEO 및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데 있습니다.

※ 핵테러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간에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음. 예를 들어 원자력 시설의 유사 시 대응체계(전원 공급의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한 대응 등)는 원자력 안전의 측면에서는 모든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핵테러 방지(핵안보)의 측면에서는 대응체계에 대한 정보도 가능한 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Q5 현 정부의 정책은 탈원전이란 국제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기후변화 대응, 저렴한 에너지 생산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꾸준한 확대 노력과 함께 현실적 대안으로서 원자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원전 증가 추세와 원전 신규 도입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Q6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

-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사회 공동의 대의로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행위자로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란 핵문제나 북한 핵문제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논의 주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 Q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된다?

- 핵안보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비국가 행위자의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을 악용한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북핵 문제 등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장이 아닙니다.  
-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를 핵안보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세계 주요 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인 만큼 양자협의 등 별도의 계기에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Q8 북한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

- 지난해 5월 베를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와 확실히 합의한다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청와대 정책소식 과월호 안내

- 제51호 세계가 주목한 정상외교 2년
- 제52호 대한민국 기술명장을 길러내는 마이스터고
- 제53호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발전 정책
- 제54호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한 환경성 질환 대책
- 제55호 죽어가는 4대강, 지금 꼭 살펴야 합니다
- 제56호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보금자리주택
- 제57호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2.4% 컨텐츠산업
- 제58호 우리고유의 맛과 멋- 한식세계화
- 제59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제60호 서민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기반 확충
- 제61호 서민이 편해지는 생활공감정책
- 제62호 대한민국의 녹색희망, 새만금
- 제63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 제64호 경제회복의 온기를 서민경제로 확산
- 제65호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과 의의
- 제66호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열린 사회
- 특집호 물, 강, 그리고 생명이야기
- 제67호 규제개혁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제68호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 제69호 서민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 제70호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이 이렇게 개선됩니다
- 제71호 내년 예산! 서민희망예산으로 준비했습니다
- 제72호 1조 2천억원 규모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 제73호 4대강의 진실
- 제74호 디지털방송 전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제75호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폐휴대폰 재활용
- 제76호 4대강 사업 예산의 오해와 진실
- 제77호 인허가 규제의 틀이 100여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 제78호 세계 최대 시장을 연 한-EU-FTA
- 제79호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제80호 법원이 한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 제81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 제82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 제83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 제84호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 제85호 서민물가를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 제86호 구제역,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제87호 지금은 서민 복지에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 제88호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 제89호 서울정상회의의 성과 계승 및 발전을 위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요결과
- 제90호 기후 급변과 국정 대응방안

- 제91호 “농협 선진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제92호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 발전과 가치 창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 제93호 대법원, 한강살리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제94호 지역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9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 서두르겠습니다
- 제96호 ‘전관예우’ 이렇게 뿌리뽑겠습니다
- 제97호 소외되었던 이웃 2만3669명이 다시 웃었습니다
- 제98호 이명박 정부가 14년 동안 유예돼 온 복수노조 제도를 노사정 합의로 시행합니다
- 제99호 서민과 소외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최대한 돕겠습니다
- 제100호 한국 경제 성적표(G20 국가와 비교)
- 제101호 만5세 어린이들도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제102호 서민 체감경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103호 4대강 새물결 준비되었습니다
- 제104호 국민 권익보호 현장 속으로 찾아갑니다
- 제105호 내년에는 국민 세금을 주로 일자리와 복지에 쓰겠습니다(2012년 예산안)
- 제106호 공기업들이 녹색도시·녹색건축으로 ‘지방시대’를 엽니다
- 제107호 <광역경제권정책 4년> 지역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제108호 한미 FTA, 정확히 아시나요?
- 제109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좋은 물건도 사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착한 소비입니다
- 제110호 학교폭력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제111호 3월 2일 농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 제112호 2012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22개 부처 및 4개 위원회 업무계획>
- 제113호 중소기업을 위한 한미 FTA 100% 활용하기

청와대 정책소식 \_ 2009년 2월 23일 창간

펴낸이 \_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역은이 \_ 최원목 국정과제1 비서관

대통령실 \_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본 책자는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